

동국대 '春來不似春'... 학내 갈등 재점화

학생처 "학생 명부 무단 폐기"VS 총학 "학생 자치 탄압"

동국대 학내 갈등이 다시 점화됐다. 동국대 학생처는 지난해 917학생총회 당시 사용된 재학생 명부를 무단 폐기한 것에 대한 책임과 학생회 간부 자격 기준 변경 등 회칙개정에 대한 자료 일치를 요구했다. 반면 동국대 학생회 측은 "학생 자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국대 학생처는 3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학생회에 전달할 공개질의 회신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동국대는 지난 3월 22일 총학생회 및 총대의원회 측에 2013년 상반기 대의원 총회에서 변경된 '학생총회 의결(성사) 기준' 관련 근거자료와 지난해 9월 학생총회 시 학교 측이 제공한 전체 재학생 명부의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동국대에 따르면 확인 결과 해당 자료들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917학생총회에서 사용했던 재학생 명부는 김건중 47대 부총학생회장이 무단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는 "재학생 명부는 총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는 개인 정보이며, 과기처에서는 안되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47대 총학생회는 재학생 명부를 폐기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본 사안 관련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이하 미동추)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문건에 대해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입증 차원의 법적 조치를"라고 했다.

동국대는 "미동추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고, 종교인을 회화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SNS에 게시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면서 "고소 사실 인지 후 미동추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학생자치 탄압을 주장하며 면학분위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학교 측의 주장과 조치에 동국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등은 3월 28일 팔정도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자회견 중에는 안드레 총학생회장과 신정욱 일반대학원 학생회장이 사발을 하기도 했다.

학생회 측은 공개질의는 학생자치 탄압임을 분명히 했다. 학생회는 "학생회는 자치기구로 상위 법인과 별개로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면서 "학생회에 대한 자치가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학생사회 안에서 절차를 통해 회칙이 개정되고 선거의 정당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교 측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적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미동추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서는 "현 총장은 종단 개입으로 총장직에 올라 표절에 대한 정확한 해명 없이 학생들에게는 고소로 탄압하고 있다"면서 "학생회는 어떠한 탄압에도 무너진 학생 자치를 바로잡고 이사회 구조 개편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총무원장 선거제도' 변화 이뤄지나

조계종 대중공사추진위, 불광사서 올해 첫 대중공사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 추천이나, 직선이나, 아니면 현행 제도 보완이나'

총무원장 선거제도 혁신을 위한 대중공사(공동위원장 정남)는 3월 31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2016년 첫 행사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첫 대중공사에는 100인대중공사 공동추진위원장 정남(월정사 주지),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등 스님들과 백효홍 대불련총무원회장, 윤기중 포교사 단장 등 125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대중공사에서 불자들은 안전으로 상징된 추천제와 직선제, 현행 선거제 개선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전개했다.

먼저 추천제인 연화미소법은 추천인단이 3명의 총무원장 후보를 추천, 갈마위원회 검증을 거쳐 종정 스님이 추천으로 선출하는 방법이다. 직선제안은 특정 연령 이상의 전 스님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족계 수지자 전원, 승랍 10년 이상자, 승랍 20년 이상자의 3개 기준에 따라 선거인단이 달라진다. 최대 1만여 명이 선거권을 지니게 된다. 선거인단 확대안은 현행 총무원장 선거인단인 321명을 최대 25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날 대중공사에 참석한 총무원장 자

승 스님은 토론에서 "3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선거를 2번이나 치르면서 많은 폐단을 느꼈기에 추천제인 연화미소법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개진했다.

자승 스님이 지적한 폐단은 선거인단에 대한 금권선거와 과도한 선거열기로 인한 흑색선거다. 이날 대중공사에서도 직선제안과 선거인단 확대안 모두가 같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125명 참석 직선·추천·선거인단 확대안 검토 지역 대중공사 후 입법화 추진 계획

은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지적됐다. 자승 스님은 다만 추천에서 소수 추천 후보가 선택돼 대표성이 저하되는 것에 대해 후보자 득표기준을 30%선으로 상향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패널토론에서는 선거제도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패널로 나선 박재현 화쟁야카데미 운영위원은 94년 개혁의 산물이자 민주주의 상징인 선거제도를 유지하되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 추진위원회가 3월 31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개최한 2016년 첫 대중공사에서는 100여 불자들이 참석해 총무원장 선거제도 혁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박 운영위원은 "금권, 매관매직 등은 철저한 법 집행의 미비에서 오는 문제이지, 선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직선제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함께 토론한 정응기 사부대중위원회 총괄처장도 "먼저 선거제의 뿌리인 교구 총회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제도에 선거인단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확대된 선거인단 구성 시 비구 스님 비율 및 재가자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 대표로 참석한 심원 스님은 직선제 도입에 대한 적극 찬성과 함께 간선제의 선거인단과 추천인단 구성에서 비구 스님 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불교사회연구소 법안 스님은 제도개혁과 함께 그 제도에 맞는 공정한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스님은 "현행제도가 왜 이런 폐단을 낳아는지 우리 스스로의 성찰이 없다면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또 다른 폐해가 나올 것"이라며 "어떤 제도이든 율장정신과 중원정법을 따르고 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중공사추진위는 개인 무선리모콘을 이용한 즉석투표를 진행한 후 5월 18일 불광사에서 토론 결과를 채택, 조계종에 제안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생활수행지침 개발... "행동 불교 이끌 것"

신대승네트워크, 3월 26일 창립식 개최

"과거 2천여년 전 '부처님 삶으로 돌아가자'는 구호 아래 출세가 보살들이 불탑광장에서 열정으로 부르짖고, 냉철하게 타파하고, 간절하게 호소했던 대승불교운동을 오늘날 정보네트워크 시대로 호호하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의 원력이며, 우리가 지금 쓰는 역사이고, 오늘 우리의 선언이자 맹약이다."

신대승네트워크(공동대표 김성규·전준호·이영철·박병기)는 3월 26일 서울 안국동 길스카우트회관 10층 강당에서 '신대승원탁회의 및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대승네트워크는 1부 신대승원탁회의에서 정관 및 전략사업 등 안건을 심의·상정하고, 2부 창립식에서 창립선언문 낭독, '불자들을 위한 수행지침' 합송 등을 진행했다.

특히 신대승네트워크는 전략사업 중

'생활수행지침 개발'에 대해 "바른 믿음(正信)을 정립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적 해탈의 연기성을 구현하고, 깨달음과 명상 중심의 정적인 불교에서 자비행 중심의 '행동하는 불교'로 전환을 추구할 것"이라며 "1개월 단위의 수행집중 과제로 수지하는 생활실천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생활수행지침'에는 불교의 궁극적 지향과 깨달음 성취를 위한 실천방안, 사회적 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과 실천활동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선학원 갈등, 실력 행사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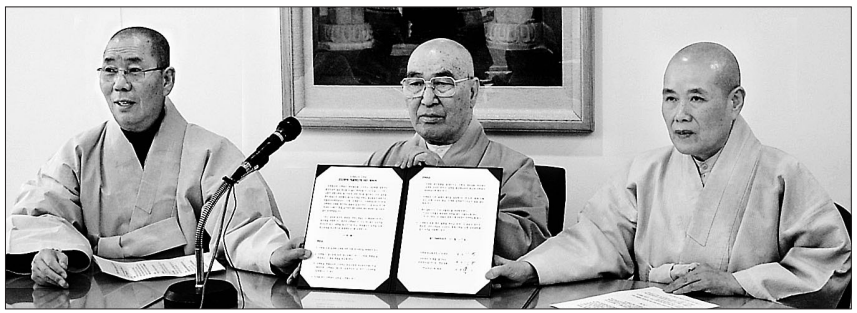
조계종·선미모·전국비구니회 공동대응에 선학원 반박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 국면이 실력 행사로까지 번질 위험에 처했다.

선학원 이사회 측이 법인관리법 폐지를 주장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과 선미모, 전국비구니회가 특별교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한 해결안에 대한 선학원 분원장 및 도제들의 동의를 직접 받기로 했다.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위원장 범등)와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상임대표 범상)은 3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자 합의서를 체결했다.

3자 합의서에는 △선학원 정관의 조계종 종지종통 봉대 조항 복구 △선학원 재단임원 자격의 조계종 승려 조항 원상 복구 △조계종 외 별개종단 설립금지 및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 위원장 범등 스님(사진 왼쪽)과 선미모 상임대표 범상 스님(사진 가운데),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효경 스님(사진 오른쪽)이 3자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 3개 단체는 이 합의서에 대한 선학원 분원장 및 도제들의 동의를 직접 받기로 했다.

선학원 현행 승계·승려증 발급 중단 △선학원 이사 1/3 조계종 총무원장 추천 △선학원 사안 총회서 의결 등 선학원에 대한 요구 내용과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원로의원과 중앙총회의원의 선학원 인사 배정 △선학원 특별법 제정 △선학원 소속 승려와 도제에 대한 각종 권리제한 해제 등 조계종 측 조치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3개 단체는 선학원 도제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 조계종 총무원과

선학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선학원은 3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합의사항에 대한 거부사와 함께 서명운동을 비판했다.

선학원 측은 "특별교구 제정은 조계종이 우리 재단을 장악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며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관리법 폐지 선행 후 진정성 있는 대화를 말한다면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신성민·노덕현 기자

태고종 중앙총회 호법원장 선출무효 결의

태고종 중앙총회(의장 설운)는 3월 2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24차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의원 54명 중 44명이 참석했으며 지홍 스님 등 보궐선거를 거친 6명이 새로 총회의원으로 신고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2014년 3월 26일 제113회 임시중앙총회에서의 호법원장 선출무효가 결의됐다.

총회에서는 호법원장 선출 적법성 논란이 거셌다. 이에 총회의장 설운 스님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불일 것을 상정해 찬성 25표, 반대 19표로 선출무효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상정된 종단부채 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은 중앙총회 의장단 위임을 전제로 만장일치 통과했으며 51억 4522만원의 2015년 세입세출결산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중앙총회는 교무부장 상진 스님 인준을 끝으로 폐회했다.

김주익 기자 kimji4217@hyunbul.com

영원한 안식의 길, 화두참선, 나를 바로보라

학산대원 대중사 조주록 강설안내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돌이켜서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생활을 영위해야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한 순간도 '나는 무엇인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행한다면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배처럼 살고, 바닷물처럼 수용하라.
 매나무가 백백이 들어서 있는 숲에는
 언제나 맑은 바람을 떨치고
 시커멓게 썩은 파도 속에도 항상 밝은 달은 나타난다.

- 철벽(鐵壁)을 부수고 벽안(碧眼)을 열다 본문 중에서 -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학산대원 대중사
 조주록 강설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6년 5월 21일 (토) 첫 법문 (오후 8시, 2년이상)
 ■ 장 소 : 학림사 오등선원 설법전 ■ 문 의 : 042)825-1724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